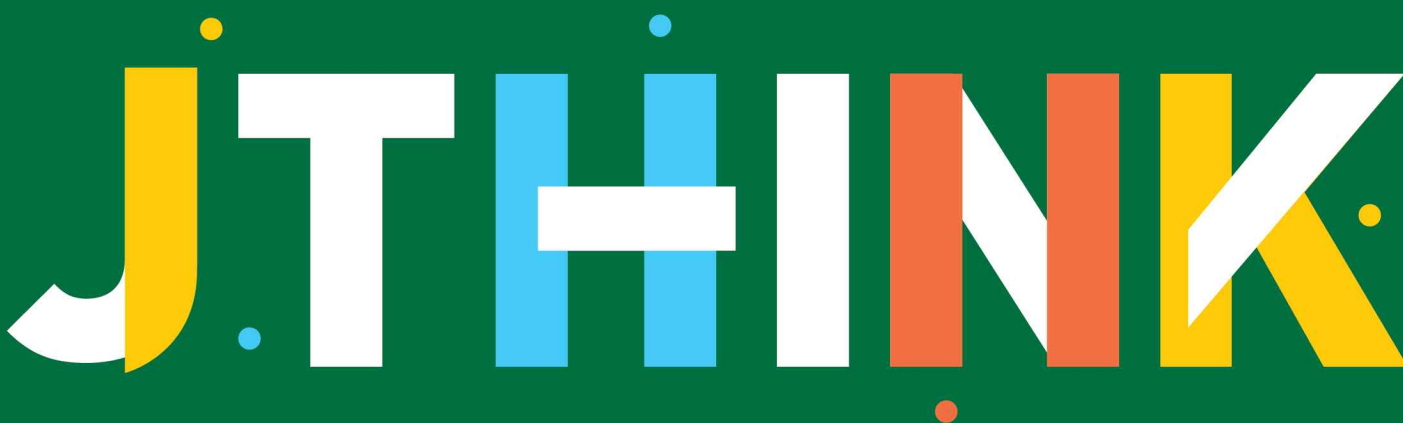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함께 살아가는 전북을 준비하자

유차정착사회통합을 잇는 전북 외국인정책으로의 전환

연구책임

박지애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요약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전북의 인구 변화는 이미 일상으로

- '24년 전북 외국인주민은 7만 9천여 명으로 **도민의 4.5%**를 차지하며, '15년 대비 **83.6% 증가**함
-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14개 시군 중 12곳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증가가 특정 산업·지역을 넘어 전북 대부분의 생활권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됨
- 국가 인구·이민정책도 단순한 유입·체류 관리에서 정착, 사회적 수용성, 갈등 예방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실행체계를 구체화할 시점**임

유치의 성과를 '지역에 얼마나 남고 연결되는지'로 볼 때

- 전북은 유학·연수,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등 **학업·근로 중심 체류 비중이 높은 반면, 거주·영주 등 장기체류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유치 규모뿐 아니라 취업·체류의 연속성, 생활·가족정착 가능성 등 **유입 이후의 정착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함**
- 지역의 실제 수요와 정착 가능성을 유치 단계부터 연결하는 **'정착연계형 유치'가 필요**함

정착 다음의 과제는 '양방향 사회통합'

- 외국인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다고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외국인의 적응뿐 아니라 **도민의 체감·수용성, 일상적 관계 형성, 생활 속 불편·갈등의 예방과 조정이 중요**함
- 전국 조사에서는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갈등 경험이 적거나 다문화활동에 참여한 집단에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은 단순한 접촉 횟수보다 학교·직장·마을 등 **생활권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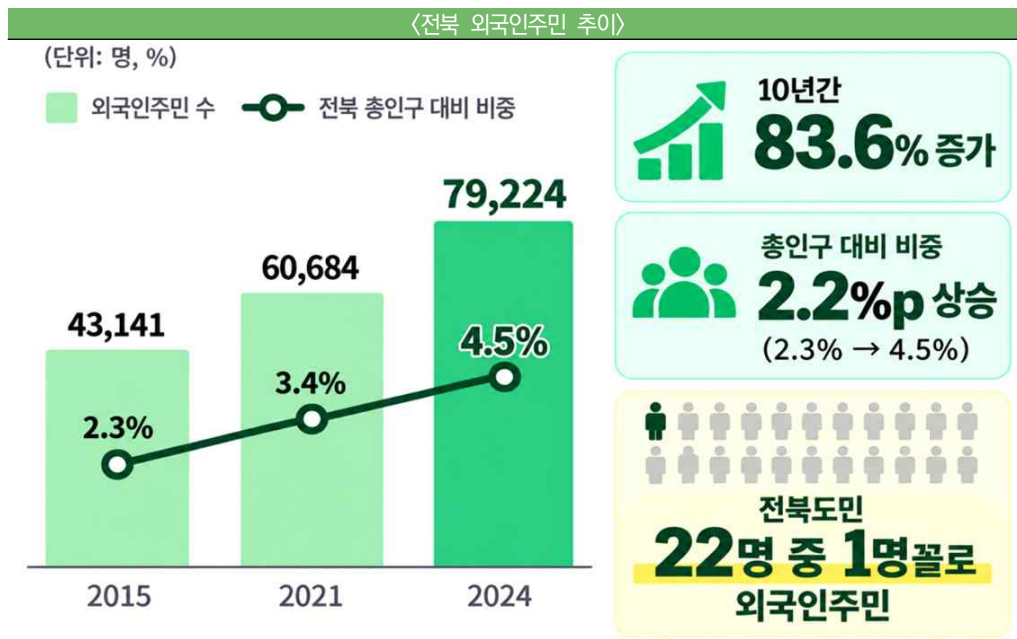
이제는 세 가지 전환으로 '유치-정착-사회통합'을 하나의 체계로

- 전환 1: 양적 유치 중심에서 지역 수요와 정착 가능성을 연결하는 **정착연계형 유치**로 전환
 전환 2: 전북 전체 평균 중심에서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정기 진단과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
 전환 3: 참여인원·지원건수 중심에서 정착 결과, 관계·수용성, 도민 체감을 확인하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환류 중심**으로 전환
-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전북 외국인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 더 큰 전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I.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전북의 인구 변화는 이미 일상으로

전북도민 22명 중 1명은 외국인주민... 인구구조 변화가 생활권의 변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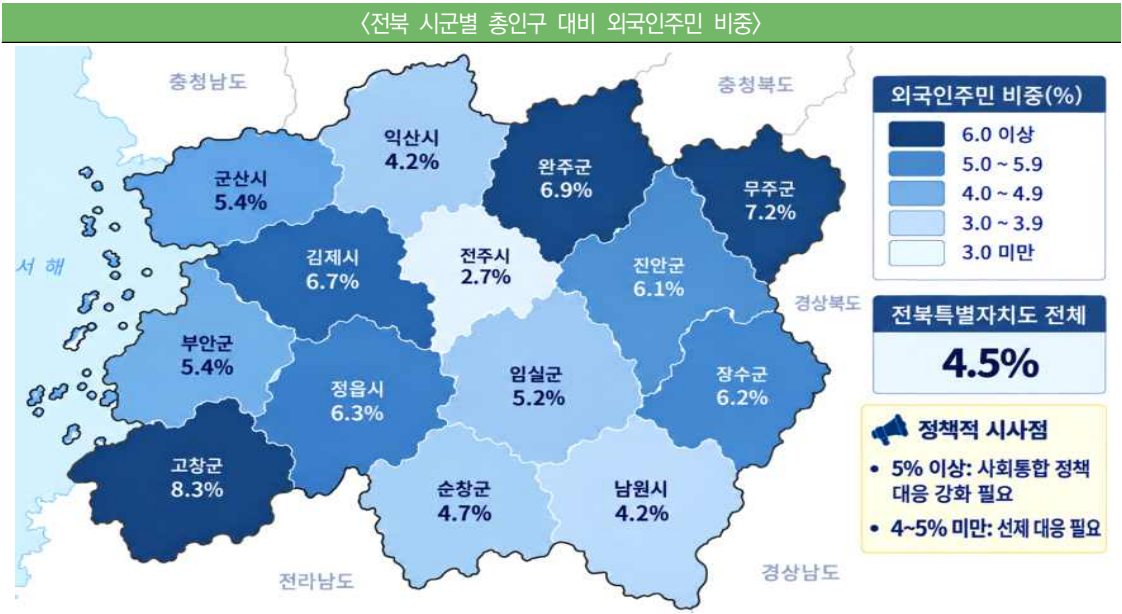
- '26.7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90만 명을 넘어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음
- 전북 역시 '24년 외국인주민이 79,224명으로, '15년 대비 83.6% 증가하였으며, 전북 총인구의 4.5%를 차지함
- '15년 43,141명에서 '21년 60,684명, '24년 79,2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가 도래함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4개 시군 중 12곳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변화는 전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

- 이처럼 외국인주민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총인구 대비 5%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함. 이는 외국인 밀집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주거지 분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관리·분석 단위로 활용됨
- '24년 기준, 전주·군산·익산을 포함한 도내 12개 시군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함. 즉, 외국인 증가는 더 이상 일부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
- 전주·군산·익산 등 3곳은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이며, 고창·무주·완주·김제·정읍·장수·진안·부안·임실 등 9개 시군은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이 5% 이상임. 더욱이 고창·무주·완주·김제·정읍·장수·진안 등 7개 시군은 외국인주민 비중이 6% 이상에 달함
- 이처럼 학교·직장·마을 등 지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인구구조 변화로 자리 잡으면서, 생활서비스와 사회통합 수요 역시 전북 대부분 지역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가 인구·이민정책도 ‘유입 관리’에서 ‘정착·사회통합’까지 확장

- ‘26.9월 「인구전략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범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와 함께 ‘인구의 국가 간 이동’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됨
-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도 ‘반(反)이민정서·갈등 중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사회적 수용성 관리와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강화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26.9월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 역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국가 인구전략의 주요 검토 과제로 다루고 있음
- 이에 외국인정책의 주안점이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에서 ‘유입된 사람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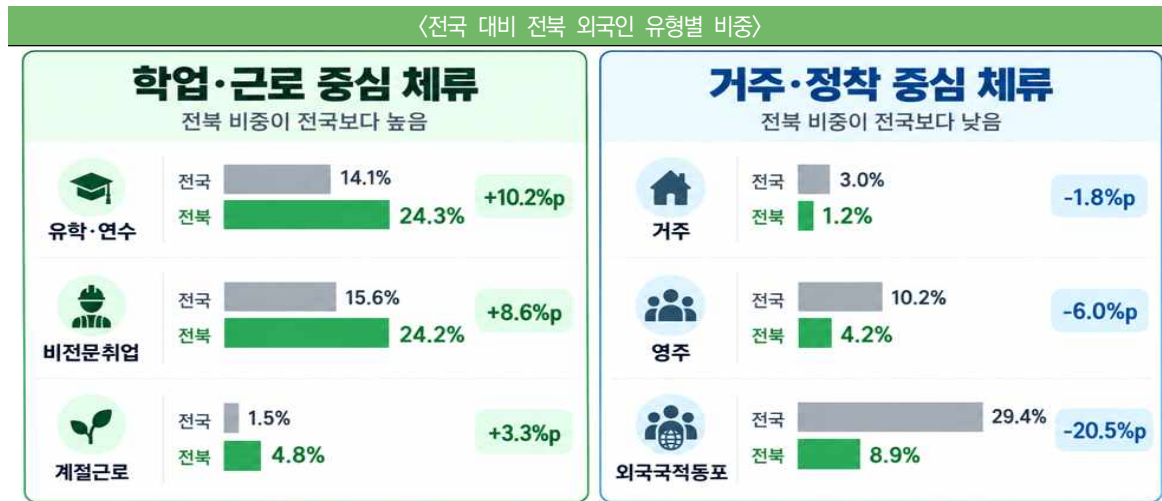
전북도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 전북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현장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력·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함. 다만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민과의 일상적 접촉도 함께 증가함
- 따라서 앞으로는 유치 규모뿐 아니라 취업·체류의 연속성, 생활·가족정착 가능성, 지역사회의 수용 여건까지 유치 단계부터 함께 살핍으로써, 외국인 유치가 실제 지역 정착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산업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II. 외국인 유치 확대만으로는 부족: 지역 정착의 중요성

외국인 유치하는 것과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다른 문제

-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이 모두 장기간 머물며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유입의 확대가 곧 지역 인구의 안정적 증가나 지역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전북은 유학·연수,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등 학업·근로 목적의 체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반면, 거주·영주·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25년 기준, 전북의 유학·연수 비중은 24.3%, 비전문취업은 24.2%, 계절근로는 4.8%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높게 나타남. 반면 거주·영주 중심 외국인 비중은 거주 1.2%, 영주 4.2%, 외국국적동포 8.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12월말 기준)

- 따라서 앞으로는 유치 규모와 함께 지역 내 지속 체류, 취업·체류자격 전환, 가족동반과 생활 안정 등 '유입 이후의 정착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양적 확대’에서 ‘정착연계형’ 유치로

- ‘정착연계형 유치’는 외국인 유치의 양적 확대를 넘어, 유치 단계부터 지역의 수요와 정착·사회통합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유입이 실제 지역 정착과 인구·산업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접근임
- 대학·산업·지역의 실제 수요, 취업과 체류자격 전환의 가능성, 생활·가족정착 여건을 연결해 ‘전북에 필요한 사람인지’와 ‘전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함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 과제, ‘유입 확대 속도와 정착·수용 기반 간 균형’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캐나다·스웨덴·영국·미국·일본 등 전통적으로 이민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국가들에서도 이민 규모를 조정하거나, 체류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확대’에서 ‘관리·조절’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일례로, 캐나다는 인구·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확대해 왔으나, 주택·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영주·임시체류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다만 필요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선별적 유치는 지속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도 이민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교육·고용과 지역사회 관계가 분리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민 요건을 조정하는 한편, 취약지역의 교육·고용·치안과 사회통합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정착·사회통합은 유치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유치 설계의 일부

- 해외 사례는 외국인 유입의 규모와 속도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사회통합 기반을 지속적으로 앞설 경우, 사후 대응에 더 큰 정책 비용과 사회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할 때는 지역의 실제 수요와 함께 고용·체류·생활·정착 가능성 및 지역사회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 대상과 규모, 속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사례	주요 쟁점	전북에 주는 시사점
캐나다	주택·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담	지역 수요·정착 여건을 고려한 유치
스웨덴	사회적 분리·갈등과 일상적 관계 형성의 지연	관계 형성·갈등 예방을 포함한 사회통합
공통	유입 확대와 정착·사회통합 기반 간 격차	유치 단계부터 정착·사회통합을 함께 설계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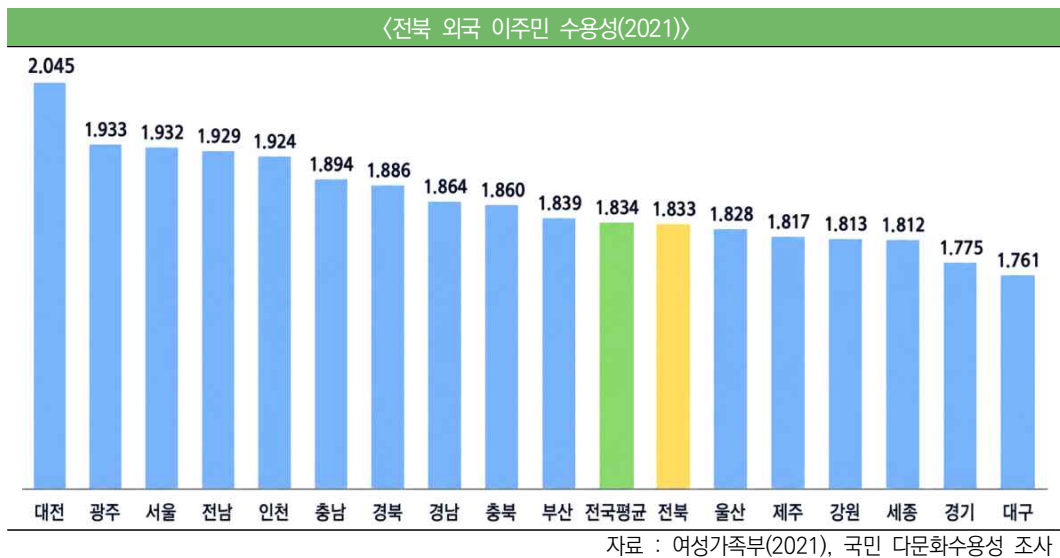
Ⅲ. 정착과 함께 살피야 할 또 하나의 과제, 양방향 사회통합

정착이 곧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전북은 한국어교육, 통번역, 행정·의료 지원 등 외국인이 지역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필요함
- 다만 외국인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학교·직장·마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지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생활규범을 조율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따라서 사회통합은 외국인의 전북 지역사회 적응만을 의미하는 일방향 과정이 아니라, 지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갈 관계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양방향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음

외국인 증가 속도에 맞춰 도민의 수용성과 생활 체감도 함께 살피야...

- 기존 조사에서는 전북의 외국 이주민 수용성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편감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전북의 외국 이주민 수용성은 1.833점으로, 대구·경기·세종·강원·제주·울산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전북(2.61점), 광주·인천(2.56점), 경북(2.55점), 서울(2.54점) 등의 순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편감이 높게 나타남(박건우, 2025)



- 다만 기존 조사들은 조사 시점과 문항이 서로 달라 최근 빠르게 변화한 지역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 도민이 외국인 증가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학교·직장·마을 등에서 어떤 접촉과 불편·갈등을 경험하는지를 최신 자료를 통해 지역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집중과 낮은 수용성이 중첩되는 지역에서는 생활 불편이나 주민 간 갈등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됨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보다 ‘어떤 관계와 경험을 형성하는지’

- '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민·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할수록, 외국인 친구·동료·이웃과 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
- 또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활동 참여 집단의 수용성이 미참여 집단보다 높았으며, 특히 다문화활동만 참여한 집단이 다문화교육만 참여한 집단보다 높은 수용성을 보임
- 이는 단순히 외국인과 자주 마주치는 것보다 어떤 관계와 경험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줌. 따라서 정보 전달이나 일회성 행사뿐 아니라 생활권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고 함께 활동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외국인을 별도의 지원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활공동체 구성원으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함

〈사회통합 정책 방향〉



자료 : 저자 작성

IV.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전북 외국인정책으로의 전환

이제는 기존 정책을 확장하기보다 ‘유치-정착-사회통합’의 연결을 강화할 때

- 2026년 전북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총 88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야가 60개(68.2%)에 달하는 등 이미 다양한 정착·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역정착플랫폼, 외국인 주거개선·의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커뮤니티 지원, 세계전북도민의 날 등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사업의 양을 늘리기보다 기존 정책을 연결하고, 실제 생활 안정·관계 형성·도민 체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환류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현시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전환이 요구됨



자료 : 저자 작성

전환 1. 양적 확대를 위한 유치 중심 → 정착연계형 유치

- 유치 단계부터 지역의 실제 수요와 함께 취업·체류의 연속성, 생활·가족정착 가능성, 지역사회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 정책 질문도 ‘몇 명을 유치할 것인지’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람인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생활·가족정착이 가능한지,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로 바뀌어야 함
- 도·시군·대학·기업·지원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취업·체류와 주거·교통·의료·보육·교육 등 정착에 필요한 조건을 연결하고, 유치 이후 실제 정착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환 2. 전북 전체 평균 → 지역별 정기 진단·맞춤 대응

- 외국인 규모와 비중, 주요 체류유형, 산업구조와 생활권이 시군마다 다른 만큼 정착·사회통합 수요 역시 동일하지 않음
- 전북 전체 평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지역 특성에 따른 정착·사회통합 주요 수요〉		
지역 특성	주요 지역·생활권	중점 과제
절대규모형 (1만명 이상)	전주·군산·익산	생활서비스 수요와 다양한 외국인 집단에 대한 종합 대응
고비중형 (비중 5% 이상)	고창·무주·완주·김제·정읍·장수·진안·부안·임실	학교·직장·마을의 반복 접촉, 주민 체감, 관계 형성·갈등 예방
산업·근로형	군산·익산·완주·김제·정읍·전주	사업장 의사소통, 산업안전, 숙련·경력 형성, 주거·교통
대학 중심형	전주	학업-취업 전환, 지역기업 연계, 생활지원, 지역사회 참여
농촌·계절근로형	고창·부안·순창·임실·진안·무주·장수 등	숙소·이동·생활안내, 고용주 역할, 주민 접촉

주 : 지역 특성은 시군별 외국인 규모·비중 및 산업·생활권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나의 시군이 여러 유형에 중복될 수 있음
자료 : 저자 작성

- 외국인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류 지속 의향, 생활서비스 접근성, 상호작용, 생활불편·갈등 경험, 수용성 등 공통 핵심 지표를 반복 측정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지역에서 불편이나 갈등이 반복되면 생활지원과 유치 계획, 관계 형성·갈등 예방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단 결과를 실제 정책에 환류해야 함



전환 3. 참여인원·지원건수 중심 → 성과·환류 중심

- 정책 성과를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몇 건을 지원했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정착 결과와 지역민의 생활 체감, 내·외국인 관계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사회통합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

〈성과 수준과 예시 지표·의미〉		
성과 수준	예시 지표	의미
투입·실적	예산, 참여자 수, 교육 횟수, 지원 건수	기본적인 사업관리에 필요
정착 결과	체류 지속, 취업 연계, 체류자격 전환, 주거·생활 안정, 가족동반	유입이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관계·사회통합	지역민과의 관계, 공동활동 참여, 갈등 경험, 수용성 변화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강화되었는지 확인
지역 체감	생활불편 변화, 학교·기업·마을 체감, 지역 서비스 유지·활력	정책 성과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

자료 : 저자 작성

-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추가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정착 기반, 취업·체류 연계, 생활서비스, 관계 형성·수용성, 갈등 예방·조정 등 정책 목표별로 분류하여 역할과 공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효과가 확인된 분야는 강화하고, 부족한 영역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세 가지 전환을 하나의 실행체계로 연결

- 앞서 제시한 정착연계형 유치, 지역별 정기 진단·맞춤 대응, 성과·환류 중심의 세 가지 전환은 하나의 정책 순환구조로 작동해야 함
- 유치 단계에서는 지역의 실제 수요와 정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이후에는 지역별 정착·사회통합 수요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함
- 또한 정책 시행 이후에는 정착 결과와 관계·수용성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효과가 확인된 분야는 강화하고 공백은 보완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의 제도적 역할이 필요한 취업·체류·교육 영역은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되, 전복과 시군은 지역 수요 파악, 생활서비스 연결,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갈등 예방처럼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V. 맺음말 : 함께 살아가는 전복을 준비할 때

외국인정책을 ‘외국인 지원’에서 지역의 미래 전략으로

- 전복은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인재의 유치는 중요함
- 그러나 외국인 유입 자체가 곧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외국인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정착 여건과 더불어, 학교·직장·마을에서 지역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속 불편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유치의 성과가 정착·사회통합을 거쳐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 앞으로의 전복 외국인정책은 ‘몇 명을 유치했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사람인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갈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유치 단계부터 함께 살펴야 함
- 유치의 성과가 안정적인 정착으로, 정착이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과 사회통합으로, 다시 지역의 인구·산업·공동체 활력으로 이어질 때 외국인 유입은 전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음

전복 외국인정책 고도화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 더 큰 전복’ 실현

-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 이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학교와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효과는 산업현장의 인력 유지, 지역 소비, 학교와 생활 서비스 유지, 지역공동체의 활력 등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민 역시 외국인 증가를 부담이나 낯선 변화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변화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함
- 결국 지금 전복이 지향해야 할 것은 외국인 유입 그 자체가 아니라, 유입된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민과 양방향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활력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임

<세계인과 함께 더 큰 전복으로 이어지는 경로>



참고 문헌

- 민수진. (2024). 외국인주민 유입이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박건우. (2025). 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 수용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연구, 28(4), 495-520.
- 박지애·전희진·최지훈. (2026). 전북 외국인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6.3.14.).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2025.6.5.). 「2024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최은송. (2026). 이민 확대에서 안정화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 개편. 국회도서관, 2026-4호(통권 제28호).

Vol. 355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